

시선

사설

대학의 뿌리 뒤흔드는 ‘갑질’ 사건을 바라보며

대학에 교수나 학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즉시 교육의 흐름은 멈추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에 직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적인 실무능력으로 대학 행정을 도맡는 직원이 부재할 경우, 교수와 학생이라는 두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리기만 할 뿐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점차 마모되다가 결국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의 3주체로 일컬어지는 교수와 학생, 직원은 위계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대등관계에 놓인다. ‘대학 구성원’의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의 역할과 의의를 결코 대신해줄 수 없는 독립적인 집단이 되며,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간에 협력하는 일 자체가 곧 ‘대학운영’의 요체가 된다.

이에 비추어, 종종 발생하는 일부 교수의 타 구성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의 차원을 넘어 대학 구성의 본질을 망각하는 무지하고 조직과괴적인 행태로서 우려를 낳는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교수가 직원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가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우리신문이 취재 도중 우연히 입수한 노동조합의 성명서 상에는 ‘10월 10일 모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소속 교수가 노동조합원(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안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내린 조치에 불만을 품고 단과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고성과 폭언,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저지르며 해당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장실 문을 잠그고 직원이 나갈 수도, 누군가 들어갈 수도 없는 ‘감금’ 상황을 조성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5년 개교 6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명목 아래 ‘상호 존중 대학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구성원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뿐이었다. 이후 제 단체별로 직급 간, 구성원 간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인 ‘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다 했으나, 아직까지 그 결론은 나와 있는 바가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아무리 멋진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들 그 이후에 이를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실체화, 구조화해놓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가치해진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선언문 선언 이후 이것을 보도자료화 시켜 대학의 이미지 개선에만 활용하고 이를 절차화하여 응분의 징계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은 요원해지고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의 구태만이 남을 것이다.

다시 강조컨대, ‘구성원 간 상호존중’은 단순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보장하여 대학 발전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인 테제다. 이것을 흔드는 행위는 곧 대학을 뿌리부터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학주보는 이번에 벌어진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취재하여 보도하겠다.

불 붙은 입학금 반환 운동
전액 반환 목표로 소송 청구

미디어 여론동향 2016.10.5 ~ 10.1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4일 국제캠퍼스에서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경희대지부 서포터즈’ 주도로 입학금의 구체적 산정내역과 사용내역 부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불붙은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요구...오는 12일에는 소송 청구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6.10.5) 이들은 대학마다 입학금 금액이 임의적이라는 점, 명분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록금과 별도로 징수되지만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입학금 전액 반환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입학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학금은 등록금과 같

만평



이 주의 주제 - 총학생회의 역할

학교 밖 총학, ‘불편한 시선’ 직시해야

이수형 기자

dtbdf112@khu.ac.kr

총학생회의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학생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총학), ‘취향저격’은 임기가 시작된 1월에만 8번의 집회에 참가했다. <‘이것은 대학이 아니다’ 교육현실 보고대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규탄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1일 실천> 등 사안도 다양한데, 잦은 외부활동은 어느 샌가 서울캠퍼스 총학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총학은 태생이 운동 집단이다. ‘총학생회’는 대학생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만든 사회운동단체다. 독재의 시대, 총학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목소리 낼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총학이 사회운동기구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학내사업에 주력하길 바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총학이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화된 정치이념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는 데다, 총학이 아니라도 각종 시민단체, 정당 등 학생들이 ‘운동’할 자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탓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감시가 학내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운동’해서 ‘저항’해야 할 대상이 국가에서 학교로 넘어온 것이다. 나라가

민주화되는 동안 대학은 쉽 없이 덩치를 늘려왔지만 학내 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학교와 학생 간에는 끊임없이 소통문제가 발생했고, 나아가 학생은 학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곤 했다. 전학대회가 잇달아 개최에 실패하는 등 정작 학생사회의 민주주의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불편한 시선’에 한몫했다.

더군다나 총학의 외부활동은 주로 타 대학 학생회나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대학교육지킴이 대학생 네트워크>, <대학생 청년공동행동네트워크>, <세월호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 등이다. 학생회칙은 외부기구와의 연대는 정책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참가 직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뿐이다. 서울캠 총학이 주도한 <대학교육지킴이 대학생 네트워크>가 발족될 당시 우리신문이 이를 지적하자, “연대기구가 완전히 결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투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외도’가 계속되니 학생들의 지지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지난 8월에 열린 <전국 대학생 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들조차 외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

대학생의 유일한 정치참여 통로로 기능하던 총학은 이제 없다. 학교 밖에서만 일하는 총학은 공감 받지 못한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나간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총학이 진정 집중해야 할 것은 ‘대학의 민주화’다.

결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두 명이 월 50만 원 이상을 내는데, 최소한 제공해야 할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고 의무만 지우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라고 썼다. 113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2008년 새 건물일 때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웃기고 방학 중 돈 들어서 소독하고 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입사 시 점검해 간 부서진 비품은 학기 중반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막상 청소해 놓으니 3초 만에 점검 끝내는 건 뭐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지난달 29일 산학협력단 주도의 첫 번째 브라운백 세미나가 전자정보대학에서 열렸다.(자유로운 학술교류 통해 연계협력 활성화/대학 홈페이지 Focus, 2106.10.5) 브라운백 세미나는 교내 연구자 간 연구정보 교류와 새로운 융합 분야 개척을 위한 자리다. 첫 세미나 주제는 ‘정밀의료와 인공지능’으로 신수용(컴퓨터공학) 교수가 정밀의료 발전 계획과 인공지능의 기여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원의 정보화 수준이 높고 단일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분야에 빅데이터 이용 등 IT분야의 기여가 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권위는
자발적 존중에서 나오는 것

세시봉

민성원 기자

minsw0280@khu.ac.kr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 한때 예능계의 트렌드였던 ‘호통’ 키워드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 예능인들이 아니라 사회적 리더들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해프닝 하나가 뉴스 상단을 점령했다. 지난 6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던진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느냐”는 질의가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다. 하지만 여론이 문제시한 것은 발언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에 동반한 그녀의 발언 태도였다. 교육감을 향해 다짜고짜 “사퇴하십시오!”라고 호통을 치는 국회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양천대소할 수밖에 없었다. ‘근본 없는 호통’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 여성 국회의원은, 알고 보니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수 출신이었다.

사회적 리더의 호통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토론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난 잔치’에서 선진적인 토론을 보기를 기대했다. 허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토론은 난투극에 가까웠다. 비방과 말 자르기, 각종 네거티브 공격만 난무하는 이전투구였다. 특히 “내가 대통령이 되면 힐러리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트럼프의 호통은 단연 압권이었다. CNN이 “역대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평론한 이 토론의 주인공들은 세계 최강국의 걸출한 대선후보들이었다.

리더들의 연이은 ‘호통’ 문제

대중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경비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경비원을 향해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된다”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신문이 최근 다루었던 체육대학 A학과 학생장의 폭행사건이나, 외국어대학 B학과 학생장의 SNS 망언 역시 맥락은 같다. ‘소통’은 사라지고 ‘불통’을 넘어 온통 ‘호통’ 뿐이다.

한 학과의 학생장에서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강대국의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사회의 인정을 받는 엘리트들이다. 중요한 보직을 맡고 사회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권위가 동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날 그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방법은 다분히 원시적이다. 호통을 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한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권위는 ‘자발적 순응’에 기초한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권위다. 호통을 통해 강요된 권위는 자발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 오늘날의 엘리트들이 이 기초적인 권위의 정의를 망각한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스스로가 이 ‘호통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한, 결코 진짜 리더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대7기화)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